

일자리 30만개 만든다더니... 또 미달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취업자 증가폭이 20만명에 그치면서 2년 연속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에 미달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천315만1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9만5천명(1.3%)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초에 제시했던 일자리 창출 목표치 40만개는 물론, 하반기에 하향 조정된 35만개에도 크게 못미쳐 정부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취업자 증감 폭은 2004년 41만8천명에서 2005년 29만9천명, 2006년 29만5천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29만5천명 그쳐

2년연속 목표치 밑돌아...경제인구도 감소

연령대별로는 30대(1만4천명), 40대(10만3천명), 50대(23만6천명), 60대 이상(12만2천명) 등 30대 이상 취업자가 2005년보다 늘어났다. 반면 10대(-3만4천명), 20대(-14만6천명) 취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해 청년층의 취업난을 반영했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이 각각 32만8천명(4.7%)과 8만7천명(3.9%)

증가했다. 반면 농림어업(-3만1천명)과 제조업(-6만7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4만4천명) 등의 취업자는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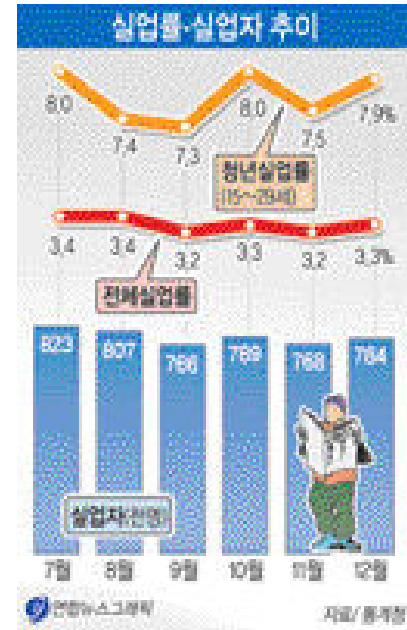
이처럼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지표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478만4천명으로 2005년보다 22만7천명(1.6%) 늘어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도 61.9%로 전년 대비 0.1%p 내려가면서

2003년 61.5%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자와 실업률 등은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실업자는 82만7천명으로 전년 대비 5만9천명(6.7%) 감소했고 실업률도 3.5%로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하지만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7.9%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한편 광주·전남도 지난해 4·4분기 경제활동인구가 동반감소하면서 취약한 고용시장 환경을 재확인했다. 광주·경제활동인구는 64만8천명으로 2005년 4·4분기보다 1천명(-0.1%) 감소했다. 전남도 경제활동인구가 93만6천명까지 떨어지면서 노동력의 공급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각각 감소했다. 광주의 취업자는 62만2천명으로 2005년 4·4분기보다 2천명(-0.3%) 줄었으며, 전남도 같은 기간 취업자가 1만4천명(-1.5%) 감소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특허심사 9.8개월

세계서 가장 빨라...美 21·日 26개월

우리나라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률을 하게 됐다.

특허청(청장 전성우)은 작년 말 1차 특허심사처리 기간 9.8개월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국의 경우 2005년 기준 미국 21.1개월, 유럽 특허청 24개월, 일본 26.0개월 등이었으며 그동안 가장 빠른 심사를 해온 독일도 10.0개월이었다.

특허청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2002년 22.6개월에서 2003년 22.1개월, 2004년 21.0개월, 2005년 17.6개월로 줄어든 데 이어 작년 말 9.8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특허청은 2004년 558명이던 심사관을 작년 727명으로 증원하고 신청기술조사 외주용역을 2004년 6만5천건에서 작년 13만3천건으로 배 가까이 확대했다.

또 심사처리 실적을 핵심 성과평가 대상으로 특별 관리해 2002년 1인당 월 54.1건을 처리해오던 것을 2006년 79.5건으로 크게 늘렸다.

이밖에 심사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6시그마 과제 수행과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질을 높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주요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조 ‘성과금 투쟁’ 중단하라”

전경련 성명·네티즌 비난 줄이어

연말 성과금 차등지급을 둘러싸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전경련이 불합리한 성과금 투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10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현대차 사옥 인근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사측에 '연말 성과금 50% 추가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동안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하며 50% 추가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잘못된 관행을 끊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분사 앞 상경투쟁에 나서며 따라 노사 양측간 갈등은 첨예화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성과금 지급을 둘러싼 현대자동차 노사갈등에 대해 “노조는 불합리한 성과금 투쟁을 중지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성명을 통해 “성과금은 노조가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해마다 정칙하는 목돈이 아니라 기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도 “노조원들은 스스로 성과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등 비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원 존중 캠페인

광주신세계 전우만 대표이사를 비롯한 팀장들이 10일 백화점에서 매장 직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사원 존중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족식'을 마련했으며, 세족식들은 무등산에서 직접 길러온 약수가 사용됐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분양가 상한제·원가 공개 철회를”

건설단체, 정부에 건의...지방 투기지역 해제 촉구도

건설업계와 전경련이 최근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 민간 확대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단체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침해하는 물론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험소지가 크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건의문을 국무총리실,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 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가지다.

또 “지방 주택시장은 전체 미분양주택 7만3천여가구중 89%가 지방에 치중될 정도로 현재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기우려가 없는 곳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 규제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시키고,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주택금융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정은 11일 오전 강봉규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시점 등을 확정한다.

당정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 확대방안을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현재 공공부분의 경우 7개 항목에 걸쳐 원가를 공개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64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전월세 대책과 청약가점제 조기시행, 투기지역내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EO 82% “기업가 정신 위축됐다”

“반기업정서·노사 갈등 탓”

국내 최고경영자(CEO) 10명중 8명은 현재 우리 사회의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CEO 각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한 뒤 10일 내놓은 '기업가 정신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0%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를 응답자는 기업가 정신이 위축된 주요인으로 반기업 정서(35.0%)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정부규제(24.0%), 노사갈등(20.0%), 기업인들의 위험감수 의지 부족(15.0%), 단기실적 중시의 경영형태(6.0%)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CEO의 개인 성향이나 기업내부 분위기 보다 기업의 외부환경이 기업가 정신 위축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대별 기업가 정신 수준(100점 만점)에 대해서는 1980년대를 80.2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했고, 60~70년대(80.0점), 90년대(76.5점), 2000년대(74.6점) 순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52.0%가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증시 본격 조정권 진입했다

외국인·기관투자 매도 행진 올들어 코스피 78.67P 하락

주식시장이 쏟아지는 매물을 감당하지 못해 빠르게 하락하면서 조정 본격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8.55포인트 하락한 1,355.79로 마쳤다. 올 들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각각 4천500억원, 6천500억원 가량 누적순매도를 기록하며 지수하락을 부채질했고 이에 따라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말보다 78.67포인트(5.48%)나 하락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1,360선)을 뚫고 내려감에 따라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락으로 인한 가격이점 부각과 함께 11일 읍선만기일과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실적 발표가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1,360선)을 뚫고 내려감에 따라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락으로 인한 가격이점 부각과 함께 11일 읍선만기일과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실적 발표가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120일 이동평균선(1,360선)을 뚫고 내려감에 따라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락으로 인한 가격이점 부각과 함께 11일 읍선만기일과 12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실적 발표가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태기자 bungy@kwangju.co.kr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세진종합건설	건설관련 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1/12	062-385-0070
핀스튜디오	사진촬영기사 및 포토샵기능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62-372-5275
신성렌탈	[삼성RT사업부] 관리직 및 영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2	062-522-0839
에스텍시스템	광주 삼성전자 정규직 안내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15	02-568-8623
한국스리엘	공무기술직 및 생산직 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6	061-330-7020
대창 E&T	에너지사업부 업무관리 보조인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7	062-383-6831
동양생명보험	2007년 특채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9	062-226-4904
한국전화번호부	KT전화번호부 관련 고객정보 확인 TM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1/19	062-511-2144
동화산기	기계설계/생산관리/기술영업/총무/기획/회계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0	062-717-7213
성진케이칼	2007년 대졸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062-943-8115
비이오포톤	웹프로그래머(리눅스,php,mysql)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20	1600-0282
에피플러스	반도체 생산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0	062-605-9738
서진산업(주)평등공정	금형수정 및 선반/밀링기공 기능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1년	2400~2600	01/20	062-949-8100
정원교육문화	[정원교육문화]진점한 정원 선생님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26	062-514-79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가짜 세금계산서 매매 집중 단속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파는 자료상 행위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뤄진다”며 “특히 인터넷 카페나 텔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자료상 행위를 집중단속, 긴급체포나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광역추적조사단반 9개반과 107개 세무서 조사과를 동원, 세일 정보 수집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세금추징, 고발 등 엄격히 대처하고 부가세를 부당 환급 받은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작년 1~9월 자료상 1천452명을 고발하고 수사당국과 공조해 10여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작년 1~11월 1만3천132명의 부당환급건을 적발, 1천99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사건 조사에 한해서는 수사기관처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인터넷이나 텔레마켓 등을 통한 자료상 행위 단속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10조원

지난해 실질적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의 적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5년 6조5천억원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준이지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4조9천억원에 비해서는 4조원 이상 줄어든 수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9천억원, 관리대상수지는 14조9천억원 적자가 각각 예상됐었다”면서 “그러나 세수입 증가 및 지출감소로 당초 예상보다는 4조원 이상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12월 정부 수입 및 지출이 집계돼야 알 수 있지만 통합재정수지는 3조원 이상 흑자를, 관리대상수지는 10조원 가량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는 세수입은 정부 예산에 비해 2조7천억원 가량 증가한 반면 지출은 2조 규모의 이월·불용액이 발생하면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